

# 김·신 악재에 靑이전 보류까지… ‘3년차 레임덕 막아라’

〈김태우·신재민〉

70%대 文지지율 40%대로 급락  
문재인 정부, 참모진 개편 초읽기  
“靑, 신년 대대적 인사개편 통해  
‘촛불민심 부응’ 초심 보여줘야”

새해 첫 달부터 청와대 주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권 초반 7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내려앉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현재 직면한 다수의 논란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40%대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와 야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를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김 전 감찰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신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외압’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각각 폭



로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긴급의원총회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공무원 폭로에 대해) 답해야 될 때”라고 압박했다.

야당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4일 ‘공약 불발’ 소식을 알렸다.

유홍준 대통령직속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은 당시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 단계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면 청와대 주요기능을 대체할 시설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등은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가했다. 박

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 프로젝트’가 전면 보루됐다”며 “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살아온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을 하니 했다”며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국민도 극소수였다고 생각한다”고 고집었다.

산업현장에서 연일 발생하는 ‘20대 노동자 사망’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악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팔탄면 인근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고층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했음을 6일 알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대 청년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26일만에 또 다른 비보가 나온 셈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연말 김용균법 통과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했지만 더 면밀히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영웅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일은 현 정권 책임이고, 어떤 일은 현 정권 책임으로 보기 어렵지만 종합하면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야당에서 제기하는 ‘집권 3년차 레임덕’도 무시할 순 없다”며 “정·野는 신년에 맞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통해 ‘촛불민심에 부응한다’는 초심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인사개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모진 개편에 돌입한다. 교체 대상자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등이 거론된다. 이번 참모진 개편 취지는 ‘집권 중반기에 따른 분위기 일신’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임 비서실장 후임자로는 ‘노영민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제조업체 23% ‘손실’… 9년만에 최대

통계청, 손실업체 전년比 4.2%p ↑  
순이익률 10% 기업 13%, 1.1%p ↓

국내 주요 제조업체 중 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이 2017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조사 대상 제조업체 중 연간 순이익률이 0% 미만인 기업 비율은 2016년 18.6%였는데 2017년 22.8%로 4.2%p 상승했다.

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순이익률 0% 미만은 해당연도에 손실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손실을 낸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7%를 기록한 아래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2016년

14.1%에서 2017년 13.0%로 1.1%p 하락했다.

순이익률 10% 이상인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2014년 12.0%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이 제조업 기업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순손실을 낸 기업(순이익률 0% 미만 기업)의 비율은 2016년 29.7%였는데 2017년 38.1%로 치솟았다.

반면, 반도체 산업 등은 호황을 누렸다.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순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2016년 12.2%에서 2017년 13.9%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등이 다수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업황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종에서 순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2016년 42.7%에서 2017년 47.4%로 뛰었다.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통계를 제공하는 2006년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2017년이 가장 높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영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를 상대로 한다.

다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 지침서 마련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

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 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면 등록취소했지만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연합뉴스

## 통계청, 농축수산물 물가 3.7% 급증

생강 66% 올라 상승률 최고치

7% 상승하며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목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이 오른 품목도 44개 탔났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생강으로, 전년보다 66.0%나 뛰었다. 2001년 (11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

생강 물가는 2년 연속(2016년 -23.8%, 2017년 -23.3%) 큰 폭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폭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복지부 월 소득 510만원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준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